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미래는 호남의 시대…내부 역량 갖춰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9조원에 달하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 많은 재원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최상철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주·전남이 갖고 있는 문화· 첨단산업 등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조선대서 열린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기조 발제차 광주를 방문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가정책 신성장 위주 전환 광주 광산업 등 유리한 위치"

-5+2 광역경제권을 재조정할 의향은.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5+2 광역경제권의 권역이 호남 1개, 영남 2개로 편성돼 있어 호남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남에 대경권, 동남권 2개 권역이 있지만, 예산을 두 배로 그 권역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착수돼 예산이 권역별로 배정되면 소외 우려가 단지 '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체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다.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선도산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된 만큼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선도 인재양성 사업'에 지역 대학의 관심이 지대하다.

▲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포함된 호남권의 선도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첨단부품소재 산업으로 정해진 만큼 이들 분야와 연관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교과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는 4개 대학이 선정될 것이다. 국공립·사립대학을 가리지 않고 연구 역량과 비전을 제시한 대학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예산만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선정대학에 지원되는 5+2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호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복안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다. 호남고속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광주~목포간 호남고속철의 노선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적인 차원의 접근보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먼저다.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당장 이 사업을 초광역개발권사업의 하나인 남해안 SUN 벨트에 포함시키는 데는 장애요인도 있다. 제주가 초광역개발권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안 발전정책인 선(SUN) 벨트 구상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사업이 준비된 서남해안 벨트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 등 타 권역은 사업 준비가 안돼 있다는게 균형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정하는 데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사업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그때 사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구체적인 착공시기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

-호남고속철 완공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 다만 광

"서남해안벨트 우선 추진 상반기 사업구상 밝힐 것"

주-목포 노선의 경우 무안, 나주혁신도시 등 어느 지역을 경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게 선결과제라는 게 제 생각이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호남의 시대가 오고 있다. 국가 정책 패러다임 지식기반,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 광주시는 대구·경북지역이 생각지도 못했던 광산업을 10년째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점하고 있지 않나.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이 남해안 선(SUN) 벨트 등 해양발전으로 전환돼 전남도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전남 만큼 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는 곳도 드물다. 이제 박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통합된 의지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수도권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사진=최현배기자 choi@

18일 예멘 관광객테러 희생자 유족과 외교부 공무원들이 탄 차량에 대한 폭탄공격이 있은 뒤 주 예멘 한국대사관에 경찰병력이 추가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서 유족·정부대응팀 폭탄 피습

인명피해는 없어…'아프간 피랍' 이어 또 테러 악몽

예멘에서 폭발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정부 신속대응팀과 유가족이 탄 차량들이 18일 폭탄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무사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응팀과 유가족들이 예멘측 순찰차를 앞세운 채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사나 공항으로 가던 중이던 오후 2시 40분께(한국시각) 폭탄이 터져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예멘 '세이윤' 지역에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테러로 현지에서 관광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했고 정부는 사고수습을 위해 16일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예멘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국에서의 한국인 테러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한국인 사망 테러는 2007년 7월의 아프간 피랍사건.

당시 아프간에 자원봉사를 떠났던 모 교회 소속 신도 23명은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탈레반은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당시 아프간 치안유지를 위해 파병해 있던 한국군 철수를 요구했고 2명이 차례로 살해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협상 전문가까지 투입하는 등 목숨을 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아프간 철군을 약속하고서야 나머지 인질은 피랍 42일만에 석방됐다.

이보다 3년 앞선 2004년 5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살해 사건은 외국에서의 우리 국민 테러에 대한 온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바로 전해인 2003년 11월에는 오무전기 직원들이 이라크 티크리트 고속도로에서 차량 이동 중 피격돼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비록 사망사건은 아니지만 2006년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방송사 특파원이 무장단체인 PFLF(팔레스타인 해방전선)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하루 만에 석방되는 등 중동지역에서의 한국인 피랍사건은 적지 않았다.

또 2006년 6월에는 원양어선 동원호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 무장세력에 납치된지 4개월만에 석방되는 등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 사건도 느는 추세다. /연합뉴스